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한 치의 빈틈없이’

도내 14개 시군·17개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 개최… 김관영 도지사, “도민이 안심할수 있도록 총력 대응”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단체장과 17개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긴급 대응체계와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맞춰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전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보완사항과 비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2년간 발생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도는 올해 중점 과제로 △기관장 중심의 비상 상황관리 체계 구축 △부단체장 주도의 상황보고 체계 정비 △시군별 통제 기준·대응 매뉴얼 정립 등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 단위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1마을 1대피지원단’ 운영과, 재해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재난 꾸러미’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물품을 사전에 확보·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 대상 대피훈련 실시, 건설현장·산림 지역 집중 관리, 산불 대응지역과의 연계 점검,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재 정비 등도 강조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14개 시군 및 17개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몇 년간 집중 호우로 도내 다수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아픈 기억이 있다”며 “올해는 이를 교훈 삼아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3년과 2024

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민선 8기 이후 인명피해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 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자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이 본격 시작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위탁부모 양성교육 확대와 제도 홍보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예비 위탁가정을 위한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전화(☎ 063-288-7770)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가정위탁으로 양육 기반 확대한다

가정위탁의 날 맞아, 위탁부모 모집 위한 홍보활동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3개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력체계 ‘시동’

전북·강원·제주, 현장사례 공유…제도 개선·공동 과제 발굴 논의

정기 협의체 운영 통해… 환경자치권 강화 및 지방 주도형 전환 모색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을 맞잡고 지역 주도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세 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3개 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회의에는 각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와 지역연구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첫날에는 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주도형 운영에서 지역 맞춤형 평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사례 중심으로 조명

했다.

둘째 날에는 제도 보완과 정책 방향 설정을 통해 향후 지역 주도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세 특별자치도는 각 지역의 고유한 환경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중앙 중심의 제도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정보 교류, 공동 건의과제 발굴, 제도 개선 제안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환경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점진적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속급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세 지역이 특별자치도로서 출발한 시점은 다르지만, ‘지역 주도의 환경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는 같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합동 워크숍 개최

맞춤형 특례 발굴·입법·자치분권 강화 전략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 연구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호 전북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일규 강원 특별자치추진단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출범시기가 유사하고 환경적 여건이 비슷한 두 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실현과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숙 전북도의원 역시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도와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민 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기로 전북 어촌의 재생과 수산업 복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어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市)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육·교육 역량을 갖춘 가정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 일 것 △자녀 수(18세 미만) 포함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부모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자격심사를 거친 후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이 본격 시작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위탁부모 양성교육 확대와 제도 홍보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예비 위탁가정을 위한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전화(☎ 063-288-7770)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과 달성… 생명경제 실현 본격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273만톤CO₂eq를 감축해 당초 목표 대비 106.6%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도 자체 진단단과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2개 과제 중 70개였으며, 이 가운데 ‘달성’ 49개, ‘정상추진’ 14개로 약 90%가 목표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감축량은 약 273만톤CO₂eq로, 목표인 256만톤CO₂eq 대비 106.6%를 달성했다. 특히 농축산(226.4%), 흡수원(106.7%), 수송(102.7%) 부문에서 뚜렷한 감축 성과가 확인됐다.

대응기반 강화대책 35개 과제 중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이 전체 예산의 76.5%를 차지하며,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도의 전략이 반영됐다.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작년 추진성과 심의·의결
지난해 온실가스 273만톤 감소… 목표대비 106.6% 달성

타났다. 농축산 부문 2개 과제는 착수 시기가 미도래해 점검에서 제외됐다.

예상 감축량은 약 273만톤CO₂eq로, 목표인 256만톤CO₂eq 대비 106.6%를 달성했다. 특히 농축산(226.4%), 흡수원(106.7%), 수송(102.7%) 부문에서 뚜렷한 감축 성과가 확인됐다.

대응기반 강화대책 35개 과제 중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이 전체 예산의 76.5%를 차지하며,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도의 전략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전북에서 개최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권역별 포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포럼은 ‘하계 올림픽과 전북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RE100 기반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자원순환, 녹색소비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진상황 점검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력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책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국가 탄소위 보고와 함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해수유통 확정… 수산업 복원대책 시급” | 전북 어민들, 생존권 보장 촉구

새만금 해수유통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북지역 어민들이 수산업 붕괴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북수산업연합회(회장 김중주)와 고창군바지락협회(회장 김영진) 소속 회원 30여 명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 기반이 붕괴됐다”며 수산업 복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도 함께해 어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중주 회장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새만금 개발로 인한 전북 수산업 피해는 약 16조 3천억 원에 이른다”며 “35년간 정부 주도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 변경을 공론화하고, 이를 새만금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새만금 매립으로 수백 년간 유지돼 온 어촌 생계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군산, 부안, 고창 어민들은



(사)전북수산업연합회와 고창군바지락협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경을 공론화하고, 이를 새만금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새만금 매립으로 수백 년간 유지돼 온 어촌 생계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군산, 부안, 고창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어업을 하며 살아왔다”며 “이제는 도민의 삶을 위한 새만금 개발로 전환돼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유도에

서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조창군 어민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조 씨는 편지에서 “해양 생태계 변화로 기형 물고기 출현, 바지락과 굴의 집단 폐사, 갯벌 낚시 개체 수 급감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많은 영세 어민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 역시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도와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민 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기로 전북 어촌의 재생과 수산업 복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어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정부와 정치권에 어떻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 여행객 위해 숙박비 최대 5만원 할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비 할인과 지역 축제를 연계한 여행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숙

박제일 페스타’에 참여해,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이용 시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숙박요금이 7만 원을 넘으면 5만원,

2만 원 이상이면 2만원이 할인된다. 예약은 11번가, 여기어때, G마켓 등 19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5월 28일부터는 ‘지역특화기획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전북 지